

[서 평]

정전협상에 대한 국제정치학자의 인문학적 접근

- 김명섭, 『전쟁과 평화 : 6.25 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강대출판부, 2015)-

박태균*

1. 정전협상 이해를 위한 필독서

지금까지 6.25 전쟁¹⁾에 대한 관심은 전쟁의 발발과 전개과정에 집중되어 있었다. 최근 6.25 전쟁 기간의 한국 사회의 변화 및 전쟁의 기억과 이미지에 대한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지만,²⁾ 여전히 한국 사회의 관심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1) 필자는 '6.25 전쟁' 보다는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지만, 이 글이 서평이고, 해당 도서가 부제에서 '6.25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6.25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 책의 60쪽에서 전쟁의 이름을 '6.25 전쟁'이라고 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필자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1950년 이전부터 형성된 것으로만 보면, 과거를 향한 무한환원론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모든 전쟁은 인류의 기원, 인간의 본질로부터 형성되어 온 것이 된다'라고 한 것은 너무나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서평이 전쟁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의 이름 명명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글을 통해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
- 2) 《한국전쟁 사진의 역사사회학》(강성현 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한국전쟁과 기독교》(윤정란, 한울, 2015),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한국구술사학회 편, 휴머니스트, 2011), 《마을로 간 한국전쟁》(박찬승, 돌베개, 2010) 등이 사회사적 관점

은 발발과 전개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구소련 자료가 공개되면서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의 문제가 더 이상 제기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책임 문제에 대한 거론을 위해서는 여전히 발발과 전개과정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탈냉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냉전적 유산과 트라우마가 계속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에 대한 관심사는 점차 전쟁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지되었는가로 그 관심이 전이하고 있다. 즉, 6.25 전쟁에 대한 배경과 발발, 그리고 전개과정에 대한 대작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³⁾ 연구자들과 사회적 관심은 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협상과 그 결과로서의 정전협정,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후 한반도의 안보체제로 점차 전이하고 있는 것이다. 양대현과 로즈마리 풋의 선구적 연구⁴⁾ 이후 국내외적으로 정전협상과 정전협정, 그리고 정전체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졌으며, 소위 ‘수복지구’와 DMZ라는 공간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정전체제를 통해 한반도의 안보적 특수성을 논의하고자 하는 연구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⁵⁾

사실 6.25 전쟁은 ‘정전협상 전쟁’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전선이

에서 나온 대표적인 연구성과들이다.

- 3)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6-7 (Winter 1995/1996), pp.30-84; 윌리엄 스톡 외, 이상호, 박성진 역, 《한국전쟁 연구의 새로운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Zhihua Shen, *Mao, Stalin and the Korean War: Trilateral Communist Relations in the 1950s* (Taylor & Francis, 2013)
- 4) 양대현, 《역사의 증인》, 형설출판사, 1993; Rosemary Foot, *Substitute for Victory: The Politics at the Korean Armistice Talk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양대현의 선구적 연구가 없었다면 줄고 《한국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책과함께, 2005)도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 5) Vilerie Gelezeau, “Beyond the ‘Long Partition’: From Divisive Geographies of Korea to the Korean ‘Meta-culture’,” *Europea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9, no. 1 (2010), pp.1-24; Nan Kim, *Journal of Asian Studies*; 한모니 까,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2017.

고착화된 가운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전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협상은 군사 리더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지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면전 기간 중 2/3이 넘는 기간 동안, 그것도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쟁을 중지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되었다. 한반도보다 더 많은 정전과 휴전을 거듭한 역사적 경우 -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 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정전을 위해 이렇게 오랜 기간 협상을 진행했고, 또 그 결과로서 형성된 정전체제가 60년이 넘게, 그것도 협정 문구에 대한 아무런 수정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는 역사상 드물 것이다.⁶⁾

《전쟁과 평화》는 이렇게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정전을 위한 협상 과정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아마도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더 이상 정전협상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없다’, 또는 ‘이 책을 읽지 않고서는 정전협상을 연구할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선언할 정도로 협상 과정 전체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 책의 전체 볼륨도 그렇지만, 이용한 자료 역시 다른 연구의 추종을 불허한다.

먼저 《전쟁과 평화》는 정전협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요즘 연구서들이 기존 연구에 대한 분석에서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며, 저자가 이 책에 대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러시아의 문서들뿐만 아니라 미국

6) 베트남 전쟁의 평화협정을 위한 논의 기간이 더 길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1968년 존슨 대통령 퇴임 직전에 이미 북베트남과의 협상을 제안했고, 물밑으로 협의가 진행중이었으며, 1972년 말에 가서야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약 4년간 진행된 것이지만, 존슨 퇴임 이후 취임한 닉슨은 존슨 시기와 철저한 선을 그었으며, 중단되었던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도 재개하였다. 이렇게 보면 베트남에서의 전쟁 중지를 위한 협상은 1972년 1년 간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전협정의 경우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었지만, 수정된 조항은 없다. Tae Gyun Park, “The Korean Armistice System since 1953 and the Origins of the Cheonan and Yoenpyeong Incident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4, no.1, 2011, pp.115-136.

과 한국의 문서들이 제대로 이용되기 전에 나온 연구에서부터 최근의 연구서들, 그리고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번역한 책들이 소개되고 있다. 아울러 정전협상뿐만 아니라 북방한계선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연구들도 소개하고 있다. 후학들뿐만 아니라 정전협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아울러 저자는 정전협상 및 협정과 관련해서 가장 광범위한 미국 자료를 이용했다. 정전협상 회의록이나 미국무부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당시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회고록과 구술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김영삼 정부에 전달한 구 소련 문서를 포함한 러시아 자료들,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과 정전협상에 참여한 중국대표들의 회고록을 비롯한 중국의 자료들 역시 주요한 자료로 이용되었다. 이외에 남북한의 자료들 역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전협상과 관련된 남북한의 자료들이 가장 홀대받고 있는 느낌도 들기도 하지만, 이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남북한의 자료가 가장 부실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⁷⁾

2. 인문학적 시각에서의 접근

가. 디테일에 강하다.

하나의 이슈에 대한 사회과학과 인문학적 접근의 차이는 여러 측면

7) 이는 비단 정전협상에 대한 자료뿐만이 아닐 것이다. 1945년 이후 한국현대사 전체에 대한 자료들이 대체로 부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한국 역사에서 존재하는 풍부한 기록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막상 1945년 이후의 자료들을 보면 그러한 자부심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토록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198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현대사 연구는 대부분 미국의 외교문서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수정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에서 나타난다. 사회과학은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 사회를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가 움직이는 법칙을 과학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주제나 대상의 보편적 성격을 찾아야 한다. 인문학 역시 그러한 유형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과학에 비해서는 인간 개개인의 예외적인 측면에 더 주목한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디테일들이 인문학 연구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전쟁과 평화》의 저자는 사회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인문학의 향기가 강하다. 첫째로 디테일에 강하다.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간다는 점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전협상이 길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바로 소통(communication)의 문제이다. 너무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정전협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언어적 제한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저자는 간과하지 않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협상과정에 참여했던 통역자들에 대해 주목하면서도 막상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도 동시 통역이 아닌 측차 통역을 하게 되면 회의 시간은 두 배로 걸린다. 만약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측차 통역 하에서 참가자들에게 배정된 시간은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것도 사용 언어가 두 개일 때에만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사용언어가 세 개라면 얘기가 또 달라진다.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두 언어로 통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한국어, 영어, 그리고 중국어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는 특성상 이 협상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정된 회의 시간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고, 회의 참석자들은 정책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여기에 더하여 각 국의 대표단은 상대방이 제대로 통역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했다. 통역자의 능력도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통

역자의 의도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었다. 만에 하나 상대방 측에서 통역이 잘못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지적도 필요했다. 협상자의 성격 못지 않게 통역자의 태도와 성격 역시 중요했다.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이러한 특징은 협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었다. 만약 통역장교가 정전협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다면, 회의 과정에서 쓸데없는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정전협상은 왜 길어졌는가? 국제연합군 대표가 영어로 말하면 한국어, 중국어 순으로 통역되었고, 조선인민군 측 수석대표 남일이 조선어로 말하면 영어, 중국어 순으로 통역되었다. 여러 개의 언어로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적대적 관계에서 동일한 언어의 사용은 감정적 충돌로 인해 적대감을 가중시킬 수도 있었다. 실제로 조선인민군 협상대표 이상조가 한국군 협상대표 백선엽을 향해 종이에 한글로 욕설을 써서 들이밀었던 사례도 있었다. 차라리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상대방의 공격적 언어를 통역하는 시간은 완충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328쪽)

저자의 디테일한 분석은 중국군이 참전한 이후 포로가 된 한국군 및 국제연합군의 수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잘 드러난다.(457쪽)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소 편저의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전사(1991[1988]) 부록 3의 표 1, 2, 3을 참고하여 재작성된 도표 6-1에 의하면, 중국군이 참전한 직후부터 정전협상이 시작될 때까지 공산군의 포로가 된 한국군은 37,815명, 연합군은 8,708명으로 총합 46,523명이었다.

이 문제는 정전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협상이 시작될 때 포로 문제에 대한 합의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뚜껑을 열자 의외의 주제가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바로 포로문제였다. 포로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포로는 ‘전쟁 수인(Prisoners of War)’이지만, 기본적으로 군인들이었다. 1949년에 조인

된 제네바 협정에 의하면 포로들은 일반적인 범죄자와는 다르며, 전쟁이 끝나면 무조건 송환하도록 되어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돌아가면 다시 군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정전협상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모두 전쟁의 종단을 원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전쟁을 통해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즉, 전쟁이 중단되더라도 상대방이 더 이상 재기할 수 없거나, 아니면 최소한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거나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래서 전쟁을 중지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될 때에도 전쟁은 계속되었다.

문제는 유엔군이 잡고 있는 포로의 수가 공산군이 잡고 있는 포로 수의 10배가 넘는 것이었다. 포로교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유엔군이 13만명이 넘는 포로의 명부를 전달한 반면 북한과 중국군의 대표는 1만 1천명밖에 되지 않는 명단을 내놓았다. 유엔군은 공산군이 5만이 넘는 포로를 붙잡고 있으면서 막상 포로 명부에는 그의 1/5밖에 되지 않는 명부를 내놓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전달했다. 물론 이렇게 공산군의 캠프에 있는 포로의 수가 적은 데에는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공산군에 붙잡힌 한국군 포로들 중 많은 수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북한군에 편입되었기 때문이었다. 북한군에 편입하지 않을 경우 얼어죽거나 굶어죽을 가능성이 컸다.⁸⁾

이렇게 공산군 측 포로수용소에 있는 포로 수가 예상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힌 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수가 실제 어느 정도에 달했는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중국 측 자료를 통해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점이 디테일에 강한 이 책의 또 다른

8) 《전쟁과 평화》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폭격에 의해 사망자가 많았을 가능성도 있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적십자사(ICRC)에 가면 북한과 중국의 적십자사로부터 온 편지들이 있으며, 이 편지에는 미군의 폭격이 포로수용소에 떨어져서 포로들이 사망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미군에 의한 인프라 폭격을 막기 위하여 북한과 중국이 의도적으로 포로 수용소를 주요 다리나 댐 근처에 위치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⁹⁾

이승만이 반공포로를 석방하기 전에 미국 측에서 이미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는 점을 밝힌 것 역시 디테일에 강한 이 책의 중요한 공헌 중 하나다. 1952년 2월 미 국무성 극동차관보 존슨과 육군 부참모총장 헐에 의해서 제기되었으며, 해리슨 수석대표도 1952년 6월 29일에서 8월 1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송원불원포로들에 대한 석방조치를 클라크 사령관에게 건의하였다.(594-595쪽) 후술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저자의 해석에는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나.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

모든 사회적 문제가 그렇듯이 전쟁 역시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고, 이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은 너무나 중요하다. 사회과학의 전제가 되는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이 인간과 사회의 분석에 전제가 되는 절대적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전쟁이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을 탄생시킨 모더니즘을 무너뜨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베트남 전쟁과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유럽의 6.8 혁명이었다. 미국에서 기성권력에 대한 저항은 한국전쟁과 냉전, 그리고 매카시즘에 대한 반발로부터 시작되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홀로코스트나 난징대학살은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인가를 보여준다. 이렇듯 인간과 인문학에 대한 성

9) 북한의 책에 나타나는 NLL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저자의 지적 역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저자에 따르면 1959년 평양정부 직속의 조선중앙통신사가 발행하는 《조선중앙년감》에 명기된 황해남도 남쪽 경계선은 이 NLL을 따라 표기되어 있었다. 그런데 2006년 5월 제4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조선인민군 대표 김영철은 《조선중앙년감》을 출판한 출판사가 그 표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인민들의 항의를 받고 출판사가 없어졌으며 3개월 안에 도표를 찢어버렸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401쪽.

찰없이 전쟁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 이상 전쟁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성찰을 위해서도 인문학은 필수적이다. 전쟁의 발발을 포함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한 ‘신험리주의’ 이론 역시 그 이름은 ‘합리주의’로부터 시작하지만, 실제 그 내용은 인간의 합리성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불가하며 전쟁을 포함한 모든 결정은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합리성 -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역시 주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⁰⁾

정전체제의 탄생에 대한 역사정치학적 분석에 있어서 인문적 성찰은 필수적이다. 한반도 정전체제는 NLL, DMZ, 미귀환 국군포로, 실항사민이라고 불린 피랍자/피난민/이산가족, 유해반환, 한국군의 정전협정 당사자성과 기속성,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과 정전협정 간의 관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민주적 운영과 지속성, 국제연합군 사령부의 평화적 역할, 그리고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등 무수한 정치적 쟁점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중심에는 이러한 체제의 성립을 결정하고, 성립된 체제를 운영하는 인간의 문제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쟁과 평화》의 백미는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지휘했으며,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분석한 부분이다. 한국전쟁의 당사국이었던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분석은 지금까지 적지 않았다. 저자는 이들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시도하였지만,¹¹⁾ 더 중요

10) Keir A. Lieber, "The New History of World War I and What It Mean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2, 2007, pp.155-191; James D. Fearon, "Rationalist Explanations for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9, No. 3, 1995, pp.397-414.

11) 스탈린과 트루만의 결정에 대해 그들이 2차 세계대전과 그 직후에 했던 결정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지적하고 있는 점은 국제정치사에 대한 저자의 폭넓은 식견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 그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변영태 외무부장관의 방송 출연 대담 자료를 발굴했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래와 같

하계는 정전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석이다. 물론 이들에게 최종 결정뿐만 아니라 협상을 진행하기 위하여 양보를 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협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며, 협상의 내용과 과정을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협상의 진행과 양상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현대사 속에서 있었던 중요한 협상들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들을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어쩌면 노태우 정부 시기의 ‘훈령조작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협상에서 협상 대표를 선택하는 문제는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여야 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여야 하면서 동시에 협상이라는 기술의 전문가이기도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전협상의 대표들에 대한 분석 작업이 부진했던 것은 연구자의 노력과 관심 부족이라는 반성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협상 대표로 참여한 이들의 성격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성격으로 인해 결국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협상 결과를 가져왔다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저자는 우선 당시 중국 공산당 대외관계 부문 최고지도자였던 저우언라이의 심복이었던 리커능(李克農)에 주목했다.(78-79쪽) 중국군 내에서 그의 권한이 평터화이보다 더 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전협상의 유엔군 측 대표였던 조이와 해리슨(304쪽), 한국 측 참여자였던 최덕신과 참모총장이었던 이형근(315쪽), 그리고 한국과 중국 측 통역자들에 대한 분석은 정전협상의 장면을 눈 앞에 그릴 수 있도록

은 주관적인 비교는 비교 대상의 부적절함이나 그들의 역할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고려할 때 적절한 비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승만은 외교정책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수행했다는 점에서 트루먼이나 아이젠하워보다는 반대편에 있었던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에 비견된다. 스탈린에게 몰로토프와 비신스키가 있었고, 마오쩌둥에게 저우언라이가 있었다면 이승만에게는 임병직과 변영태가 있었다.”(261쪽)

해 준다.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자들조차도 분석하기 어려운 주
도 인물들에 대한 분석은 단연 이 책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 중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3.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

저자가 이 책이 자신의 인생에서 한 획을 긋는 작품으로 심혈을 기울
였다는 점은 책 전체를 읽으면서 너무나 잘 느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대작을 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은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작은 저자의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되고 있
다. 저자는 과거 자신이 쓴 글에 대해 ‘혈기왕성했던 대학원생에게는
맹목적 반공주의에 의해 가려진 진실을 밝혀내고, 억울하게 죽어서 말
할 수 없게 된 원혼의 목소리까지 대변하는 한편, 워싱턴과 서울의 표
준에 따라 쓰여진 역사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통일지향적 현대사를
써보겠다는 과욕이 앞섰다’고 평가했다. 그런 만큼 정전협상에 대해서
어떤 연구자도 이 책 이상의 자료 발굴과 분석을 하는 것은 당분간은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주는 아쉬움 역시 적지 않다. 첫째로 이
책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인물에 대한 분석이 이 책의 전체적 논지에
서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연결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를 움직이고 그 방향타를 잡고 있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 인간을 분석하는 것
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결국 방향타를 잡은 특정한 인간의 모습이 결국
역사에서 어떠한 특징을 만들어내는가와 연결되어야 한다. 정전협상
과정에서 각 진영의 대표로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한다는 것은

그들의 역할로 인해 정전협상이나 정전체제가 다른 경우와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을 나타내게 되었는가를 찾아내야 한다. 이 책에서 인물들을 분석한 것은 분명 중요한 시도이지만, 그러한 분석이 정전협상이나 정전체제에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는가를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기왕에 분석이 이루어졌던 최고 정치지도자들에게 대한 분석과 평가가 정전협상과 체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대체로 이미 구 소련 문서를 통해서 드러난 바이다.

둘째로 기존의 주장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이 나타나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 해석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 우선 정전협정에 대한 한국 내 반대에 대한 저자의 평가가 객관적인가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저자는 ‘통일없는 정전’에 대한 국내의 반대 여론이 매우 강했으며,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1953년 6월11일 서울신문의 사설에서 정전협정 무효를 주장하는 이승만을 옹호했으며, 한국민의 분노는 “요원의 불꽃과도 같이 폭발 만연하였던 것”이며, 서울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588쪽, 630쪽) 그러나 당시 정전반대 시위기관에 의해 동원된 시위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3년이나 계속된 지긋지긋한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을 당시 국민들이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평화통일을 주장했던 조봉암의 인기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정전협정의 성격에 대한 평가 중에서 ‘일본의 우익 전체주의를 봉쇄하기 위한 한국의 의도’가 견지되어 있다는 주장 역시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사령관(주한유엔군사령관 겸임)이 갖고 있었던 것이 남북한에 대한 동시 봉쇄의 의미를 갖는다는 탁월한 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본 군국주의 봉쇄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봉쇄의 효과가 정전협정 때문인지, 아니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합의의사록(1954년) 때문인지가 불분명하

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유럽의 냉전체제가 갖는 이중봉쇄 - 독일 재무장과 소련의 위협에 대한 봉쇄 - 와는 다른 한반도에서의 삼중 봉쇄체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전협정과 정전체제의 성격에 대한 규정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결론과 맞닿아 있다면,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오히려 한국군과 일본자위대에 대한 미국의 철저한 통제, 그리고 정전협정으로 인해 끝나지 않은 전쟁은 한국과 일본에서 독특한 성격의 극우세력, 즉 반외세적인 성격이 아닌 외세 추종의 극우세력이 등장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장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1953년의 반공포로 석방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해석 부분이다. 기존의 연구와 사회적 통념은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을 ‘괘거’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이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주었다는, 다시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으로 성공적인 전략으로 해석되어 왔다.¹²⁾ 그러나 미국의 문서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리고 딜레스 국무장관과의 편지를 보면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³⁾

이렇게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전쟁과 평화》는 새로운 해석을 내려주고 있다. 우선 반공포로 석방이 있기 전에 이승만에 미국에 요구했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점은 저자도 인정했다.(587쪽)¹⁴⁾ 그러나 이러한 반공포로 석방은 이승만 대통령이 혼자서 고집을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정부와 군부 내 일부 인사들이 이미 주장했던 송환불원포로

12) 김일영, 《건국과 부국: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재조명(개정판)》, 기파랑, 2010, 3장 참조.

13) Tae Gyun Park, “What Happened 60 Years Ago?: ROK-US Deep Distrust Between president Rhee and Eisenhower,”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 21, No. 1, 2014, pp.37-53.

14) 저자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테이블로 미국 정부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두 개의 주장이 서로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석방에 대한 방안을 결국 완성시킨 것이며, 이는 ‘폴리지 않고 있던 매듭을 자른’ 행동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미국의 입장에서 송환불원 포로들의 수자를 경감시켜 주었으며, 공산국 측에도 체면치레용 알리바이를 제공해 주었다고 보았다. 정말 그랬을까? 과연 그렇다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왜 그렇게 화를 냈고, 역대 주한미국 대사들은 한미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의 시기를 반공포로 석방 시기로 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지막 결론은 반공포로 석방조치는 정전협상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 체결 및 1953년 8월 8일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었다.(595-596쪽) 8월 8일 가조인이 되었다면, 이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였다. 이승만이 원했던 것은 주한미군은 놔두고 중국군은 북한으로부터 나가는 것이었고, 정전협정은 맺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정전협정 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이 NATO를 제외한 다른 동맹국들에게는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었던 자동개입조항을 삽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승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고, 반공포로 석방으로 인해 정전협정 체결일이 연기되었는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어떻게 저자의 평가와 조응할 수 있는가?

이상과 같은 평자의 논평이 저자의 대작 전체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동시에 이 책이 ‘서로 봐주기’ 또는 ‘정치적 해석 후 모른 척 하기’에 너무나 능숙한 한국 학계에서 생산적인 논쟁을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샘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통해 저자와는 다른 견해를 노출하였다. 정작 정전협상에 대해서 글을 쓸 때에는 이 책을 다시 펴 볼 수밖에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